광주경찰 '현대판 장발장' 사회 복귀 앞장

지역 경미범죄 사범…지난 5년 간 425명 구제 생계형 범죄 등 사회적 약자 지원…심사도 공정

광주 경찰이 운영중인 '경미범죄심 사위원회'가 생계형 범죄로 처벌 위기 에 처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데 큰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.

특히 생계를 이유로 경미범죄를 행한 사회취약계층의 안타까운 사연이 외부로 알려져, 지자체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 는 등 선 순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.

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

년 간 경범죄 심사 대상자 중 감경처분을 받은 인원은 총 425명으로 파악됐다.

광주경찰은심사제도가지난2015년 북부경찰서에서 시범 운영된 이래, 감 경처분 심사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.

연도별로는 2020년(40명 중 40명), 2018년(75명 중 74명), 2018년(66명 중 64명), 2017년(142명 중 139명), 2016년(109명 중 108명)에 각각 감경 처분을 받았다.

이처럼 감경처분 대상자에 대한 구제 율이 90%를 웃도는 이유는 절도, 무전 취식 등 생계형 범죄 등이 대부분을 차 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.

경찰은 "생계형 범죄도 형사적 처벌 이 분명 필요하다"며 "하지만 범죄의 피 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칫 극한 상황에 내몰릴 우려 가 있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구 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"고 설명했다.

이에 따라 경찰은 사회 취약계층의 회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매달 가동하고 있다.

최근에는 광주 북부경찰서는 북구의 한 텃밭에서 고사리 약 200g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A씨(78)를 체포했지 만, '동종 전과가 없는 점', '어린 손자 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몸 아픈 아 내를 위해 절취한 점'을 감안해 감경처 분을 내렸다.

경찰은 또 사회적 약자 보호뿐만 아 니라 경미범죄 심사제도 악용을 방지하 기 위해 공정한 심사에도 심혈을 기울 이고 있다.

심사 최종 결정권자인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외부 위원으로 변호사 등 5명을 위촉해 위원회를 구성한다.

이외에도 경찰은 경찰청 운영규칙에 준해, 사건 경중에 따라 심사요건 완화 해 적용하고 있다. 경찰은 특히 대상자 의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결 심판을 통해 훈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.

또한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수급 여부, 정신 박약 등을 함께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.

광주지방청 한 관계자는 "경찰은 즉 결심판을 통한 적극적인 구제를 지속적 으로 이어가겠다"며 "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아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데 부단한 노력을 기하겠다"고 말했다.

/최문석 기자

오늘의날씨 광주 광양 순천 나주 20~29 ■ 목포 여수 21~26 일출 05:24 일몰 19:50 월출 20:57 월몰 06:03 흑산도 🌥 19~24 20~29 구례 20~30 화 순 20~28 곡성 19~29 영 광 19~28 완도 20~26 함 평 강진 🌥 20~27 19~28 무 안 19~27 20~27 장흥 20~28 20~27 해남 20~26 고흥 19~26 21~27 보성 19~26 민조 03:05 14:56 여수 만조 09:42 22:28 간조 08:17 20:14 간조 03:49 15:41 문의 :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

'드라마 제작비 2억원 반환' 방송불발…영광군 2심도 승소

영광군이 드라마 제작 지원금을 반환을 요구하며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.

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-2민사부는 영 광군이 A · B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드라마 제작 지 원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A회사의 항소를 기 각했다.

영광군은 2017년 12월 A · B회사와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서를 작성했다. 영광을 촬영지로 하는 드 라마를 제작하는데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. 방송 예정일은 2018년 상반기였다.

A사와 B사는 독립된 계약 주체지만, 이 계약과 관련해서는 B사가 대표해 진행하기로 했다. B사는 드라마 제작에 들어갔지만, 2018년 9월까지도 드라 마 제작을 완성하지 못했다.

해당 드라마는 소송 시점까지도 완성되지 못했으 며, 방영도 이뤄지지 않았다.

이에 영광군은 A ·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

1심은 'A사의 채무면제에 관한 합의가 문언상 분 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. 피고들은 연대해 영광군에 2억원을 지급하라. 영광군이 청구한 지연 손해금 중 일정액은 기각한다'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.

이에 A사는 항소했다.

항소심 재판부는 "A사가 드라마 제작 지원 계약 의 계약서에 당사자로서 기명날인했다. 특별한 사정 이 없으면 A사도 계약의 채권·채무를 가지는 당사 자로 확정됐다고 봄이 옳다"고 판단했다.

/김영민 기자

"여직원 성추행 공기업 간부 해임 정당"

법원 "고도의 청렴성 요구"

법원이 회식 자리에서 다수의 여직원 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공기업 간 부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.

5일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A 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모 공기업을 상 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.

해당 공기업은 내부고발자 익명신고 시스템에 A씨의 성희롱에 관한 고충 신고가 접수되자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A씨를 해임했다.

회사 회식 자리 또는 이어진 술자리 에서 간부인 A씨가 불필요한 신체 접 촉을 했다는 여직원들의 고충이 신고의 주된 골자였다.

한 여직원은 회식 다음 날 출근해 상

사인 A씨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상기 시키는 한편 불쾌했었다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는데 이후 업무처리에 관한 간섭 ·인신공격 · 각종 음해 등 A 씨의 보복성

행동이 계속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. A씨는 '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. 소명 기회를 차단하는 등 방어권을 침 해했다. 해임은 부당하다'며 회사를 상 대로 소송을 제기했다.

재판부는 "해임에 관한 회사의 징계 절차 과정에 어떠한 하자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"고 판단했다.

재판부는 "공기업인 회사가 수행하 는 직무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면 이 회사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게 준하 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"며 A씨 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

/김영민 기자



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5일 여름철새 검은댕기해오라기가 담양의 한 하천에서 먹이 사 "배고프고 짜증나" 냥을 하다 실패하자 깃털을 세우고 물을 발로 차며 신경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. 햇볕이 잠시나자 빛을 받은 나무가 물에 반영돼 북극지방의 오로라 처럼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. /김태규 기자

골프장 캐디 피격 총탄, 군부대 '유탄'확인

사고 탄두 강선흔과 일치…육본, 재발 방지 최선

에 맞은 사건 조사 결과, 총탄은 군 사 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으로 확인됐다.

육군본부는 지난 4월 23일 담양군소 재 민간골프장 직원(캐디)이 업무 중 총탄을 머리에 맞아 다친 사고의 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.

사고원인은 골프장 인근약 1.4km 떨

담양군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총탄 어진 군부대사격장에서 '사격 도중 발 생한 유탄에 의한 것'으로 확인됐다.

사고 당시 사격에 참여한 총기 11정 을 회수해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 구소에 감정해 사고 탄두에 남겨진 고 유의 '강선흔' 과 일치하는 총기와 사격 인원이 확인됐다.

유탄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

사격 장면에 대해 CCTV 녹화영상 판 독과 사격통제관 • 부사수의 진술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, 사격 간 위험을 유 발할 만한 고의적인 행동은 발견되지 않았다.

다만 사격 자세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사격하는 특성상 사격 자세의 불안정 성, 조준선 정렬 시 총구의 상 · 하 움직 임 등에 의해 유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.

사격장 안전관리 조사에서는 사격장 에 늦게 도착한 일부 인원이 사격전 위 험성 예지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, 유탄 을 발사한 사격 인원도 교육을 받지 않 은 것으로 확인됐다.

육군은 해당 사격장을 '차단벽 구조 물 사격장'으로 개선, 구조로 보완을 거쳐 사격장 안전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다.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격 장 운영은 중단한다.

사고 원인이 군부대 사격장의 유탄으 로 확인된 만큼 피해자 치료와 회복을 위해 육본환자전담지원팀을 편성해 지 원하고, 국가배상법 등 관련 법령이 정 한 절차에 따라 피해배상을 진행할 계 획이다.

육군본부는 지역 관할 군사경찰부대 와 육본 중앙수사단 전문 수사요원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2개월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했다.

육군본부측은 "이번 사고를 교훈 삼 아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"고 밝혔다. /김종찬 기자

